

완주·전주 통합 ‘문화·체육·산업’ 상생비전

전주시, 통합 염원 담은 9개 주요 사업 발표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위한 문화·체육·산업 등 다양한 인프라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통합에 대한 염원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전주시가 완주·전주의 행정통합을 염원하며 문화·체육·산업 관련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완주군민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15일 시와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위원장 박진상)에 따르면 시청 브리핑룸에서 담당 분야 시 간부공무원과 박진상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상생발전 비전’ 브리핑을 통해, 문화·관광·산업 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9개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시청·시의회 청사 이전 등을 골자로 한 첫 번째 행정 분야와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교통 분야, 농업 분야 비전에 이어 완주군민협의회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반영해 발표한 4번째 상생발전 비전이다.

문화·관광·산업 분야 주요 9개 사업은 △군지역 아파트, 기존 군민에게 우선 청약권 부여 △대형 상업시설 유치 △봉동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설립 △현대자동차 급 대기업 유치 △경륜장 이전 △전주월드컵골프장 18홀

확대 이전 △완주·전주 특성과 관광벨트 지정 및 조성 △K-한지 국제교류센터 건립 △완주·전주 통합 역사박물관 신축 등이다.

먼저 시는 완주·전주 통합 이후 예상되는 청약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군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지역 아파트 우선 청약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시는 현재 전주에 백화점과 쇼핑몰 등 16개 대형 상업시설이 위치한 반면 완주군에는 유사 시설이 없는 만큼 완주·전주 통합 이후 완주군 내 대형 상업시설 유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통합 이후 전담 TF를 구성해 유통업체 접촉과 투자 유치를 위한 행정을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대형 상업시설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 우수제품 입점 △농축산물 직매장 설치 등 다양한 상생 방안을 병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봉동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추진해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확대,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이 이뤄지는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전주시와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담당 분야 시 간부공무원과 박진상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상생발전 비전’ 브리핑을 통해, 문화·관광·산업 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9개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 분야의 경우 시는 1991년 준공돼 30년이 경과한 자연거점경륜장의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규모 대회 유치를 위해 완주군 일대에 최신허 경륜장을 이전 조성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호남제일문 북함스포츠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을 고려 중인 전주월드컵골프장도 18홀 및 클럽하우스 등을 약 800억 원 규모로 확대 이전할 예정이다.

나아가 시는 전주와 완주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역사자원 등을 잇는 특색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농촌과 도시를 넘나드는 체류형 관광지로 나아가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시는 K-한지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완주 대승한지마을 일원에 K-한지 국제교육센터를 조성하고, 국립전주박물관 인근

현 전주역사박물관을 완주군의 지역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완주·전주 통합 역사박물관으로 신축 이전해 전북권 공동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 박물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문화·체육·산업 분야의 상생발전비전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닌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행안이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전주와 완주가 함께 전북 경제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사업’ 공모에 낙수정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사진은 위치도.

낙수정마을 주거환경 개선된다

전주시, 국토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공모 선정

노후주택이 밀집된 전주시 낙수정마을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개선돼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사업’ 공모에 낙수정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마을사업 대상지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노후주택을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연계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으로, 낙수정마을의 지원 규모는 약 50채 내외이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집수리 자부담분이 기존 20%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약 60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 관련 낙수정마을은 지난 1960년대 이후 판자촌 및 파난민촌으로 형성된 마을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마을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낙수정 새마을사업에는 총사업비 약 43억 원이 투입되며, 시는 오는 2027년 전체 사업 완료로 목표로 △안전 확보를 위한 계단 및 골목길 정비 △생활·위생 인프라 개선을 위한 주민공동복합이용시설 및 원터 조성 △주택 정비를 위한 집수리 및 공·폐가 정비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인후반촌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본격화

전주시,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열고 당선작 선정

전주시 인후반촌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윤곽이 나왔다.

시는 최근 인후반촌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 건축설계 공모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에이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지우산 그라운드: 지우정’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설계안은 다수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균형 잡힌 건물 외관 및 배치로 보행 안전을 배려한 점과 보차분리 및 안정적인 주차 공간 구성’이라는 평가와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선정된 당선작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복지·문화·창업 복합 커뮤니티 공간과 지역 주민의 교류·편의 공간 등을 갖춘 지역자력형 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거점시설 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공사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인후반촌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 환경을 지닌 진북동과 인후동, 서송동 등 전주시 3개동이 접해 있는 지역에 지역 맞춤형 정주 환경 개선과 거주환경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권희성 기자



평화대성약국 착한가게 현판 전달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주민센터(동장 이은혜)와 평화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전석진)는 ‘평화대성약국(대표 임준상)’을 방문해 착한가게 39호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평화대성약국 임준상 대표는 “이웃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싶어 정기부를 생각하게 되었다”며,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작으나마 나눔을 실천할 기회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 사업 추진

전주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고, 지상 이전이 불가피한 곳에는 화재 안전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지하 급속 충전시설은 그대로 지상으로 이전하고, 완속 충전시설은 충전제어가 가능한 안전한 스마트제어충전기로 교체해 지상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의 여건상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소방지벽과 질식소화덮개, 상

방향방사장치, CCTV 등 4종의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 8~9월 실시한 수요조사 시 신청한 공동주택이 우선 지원되며, 지상이전 사업은 급속 충전시설은 1기당 1200만 원, 완속 충전시설의 경우 1기당 1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연소방지벽 등 4종의 화재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단지당 최대 7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상 이전 사업의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화재안전시설 지원사업은 15일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과(현대해상 4층)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